
**‘2022년 재정역량강화(Fiscal Policy Forum:
Role of Economy and Finance in Spain)’
출장 보고서**

2022. 10. 19.

목 차

I. 개 요	1
1. 출장목적 및 세부계획	1
2. 프로그램	2
II. 강의별 주요 내용	4
III. 연수 참가자 만족도조사 결과	53
* 별첨. 강의자료	

I. 개 요

1. 출장목적 및 세부계획

☐ 목 적

- 스페인의 재정준칙 도입배경, 국제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 경험,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재정의 향후 운용방향, 스페인 Spending Review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스페인의 주요 재정정책 담당자들 및 관련 연구자들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
- 기관별 강의 이후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 방문기관

- 폼페우 파브라 대학교(ESCI-UPF)
- 카탈루냐 총국 경제재정부
- 재무부-재정연구원(IEF)
- 스페인 재정독립기구(AIReF)

☐ 출장개요

- 일 정: 2022년 9월 21일(수) - 9월 29일(목), 7박 9일
- 장 소: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 출장자: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전해원 전문연구원, 전초란 전문연구원, 노희원 전문연구원, 이수은 전문연구원

2. 프로그램

일 시		주요 내용	면담자
9.21(수)	11:40 출발- 19:00 도착	인천공항 → 스페인 바르셀로나	연수 참석자
9.22(목)	9:30-12:00	[강연 및 현장방문] 폼페우 파브라 대학교 (ESCI-UPF) - The Overall Evaluation of Spanish Fiscal Rules: Background, Achievement and Limits	Mr. Ramon Xifré (Professor and Research Director at ESCI-UPF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13:00-14:00	환영 오찬	연수 참석자
	14:30-16:30	[브레인스토밍] 한국형 재정준칙의 성공적 도입 및 실효적 운용에 주는 시사점	연수 참석자
9.23(금)	9:30-12:00	[강연 및 현장방문] 카탈루냐 총국 경제재정부 - Catalan Economy: The Strength of an Innovativa and Outward-looking Nation - How is “Next Generation Fund” helpful to overcome COVID-19?: Any Other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atalunya - The Budgetary System of the Catalan Government	Mr. Jordi Baños (Director General for Budget), Ms. Mariona Sanz(Director General for European Funds) 외 4인
	14:00-16:00	[브레인스토밍]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Next Generation Fund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연수 참석자
9.24(토)	09:30-10:30	[발제] 한국의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부 선임연구위원
	11:00-12:00	[브레인스토밍]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예산당국, 국책연구기관, 국회의 역할	연수 참석자
9.25(일)	13:30 출발- 14:55 도착	스페인 바르셀로나 → 스페인 마드리드	연수 참석자
9.26(월)	9:30-12:00	[강연 및 현장방문] 재무부-재정연구원(IEF) - The Procedure and Effectiveness of Spanish Spending Review * Some Remarks on The Direction for 2023~2026 Medium Term Fiscal Policy	Mr. Ignacio Moral Arce (IEF 자문위원 겸 UNED 조교수)
	14:00-16:00	[브레인스토밍]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 방식에 주는 시사점	연수 참석자
9.27(화)	9:30-12:00	[강연 및 현장방문] 스페인 재정독립기구(AIReF) Session 1. AIReF's origin, role, legal suppor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ession 2. The fiscal framework Session 3. AIReF's role in the fiscal framework Session 4. The Quality of Public Finances	Mr. Diego Pérez (Head of the Legal Affairs Division) 외 7인

일 시		주요 내용	면담자
	13:00-14:00	송별 오찬	연수 참석자
	14:30-16:30	[브레인스토밍] 우리나라에도 재정독립기구가 필요한가?	연수 참석자
9.28(수) ~ 9.29(목)	16:40 출발- 익일 16:00 도착	스페인 마드리드 → 인천공항	연수 참석자

II. 강의별 주요 내용

방문기관 : 폼페우 파브라 大 (ESCI-UPF)

9월 22일(목) 09:30~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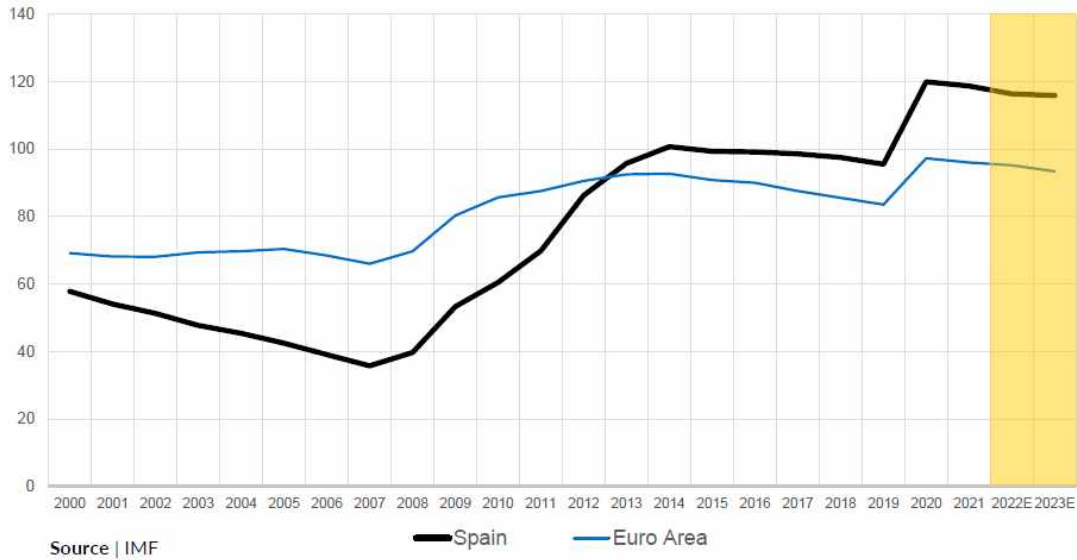
주제: The Overall Evaluation of Spanish Fiscal Rules: Background, Achievement and Limits (Mr. Ramon Xifre, ESCI-UPF 교수)



1. 거시경제 현황

- ☐ GDP 대비 정부부채가 2009년 40%에서 2013년 100%까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함.
 - 당시에는 그리스 경제 문제와 함께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EU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것을 염려했음.
 - 재정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됨.
- ☐ GDP 성장률은 4%에서 -3%로 감소, 실업률은 10% 미만에서 2013년 25%로 증가

[그림 1] 스페인과 EU의 정부부채비중



자료: ESCI -.Universitat Pompeu Fabra 대학교 세미나 발표자료(2022.09.22.)

2. Fiscal Reform의 배경 - 스페인 case

[그림 2] 구조적 재정개혁의 타임라인

EU fiscal reforms	● SGP													● SGP reform	● Six Pack	● Fiscal Compact	● Two Pack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Spanish fiscal reforms					O. Law 5/2001					O. Law 3/2006				First Cutbacks	Art. 135	O. Law 2/2012	AIReF
Type of Spanish government	Conservative minority			Conservative majority			Socialist minority			Socialist minority			Conservative majority				

자료: ESCI -.Universitat Pompeu Fabra 대학교 세미나 발표자료(2022.09.22.)

☐ EU Fiscal Reform: 안정 및 성장 협약 (Stability Growth Pact: SGP)

- GDP 대비 정부부채 60% 이내

☐ EU 회원국이라면 지켜야하는 조건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음.

- 2005년에는 장기간 60% 달성, 2006년에는 O. Law도 채택하려는 등 개혁이 시도된 바 있음.
- 2009년 그리스의 국채 가치가 감소하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유사한 상황에 빠짐.
- 2001년 스페인 경제가 좋을 때 더 보수적으로 재정규칙을 수립했으면 매우 도움이 되었을 것이지만 기회를 놓친 격

□ EU와 스페인은 MoU 체결

- 북유럽의 정부부채를 우선순위로 하여 보상하면, EU가 스페인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포함.
- 복지 관련 프로그램 등 가능한 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함.
- 스페인은 해당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지만, 부정적인 스페인 내부반응으로 2012년 정권교체로 이어짐.

□ Fiscal Sector에 대한 신뢰회복 차 독립재정기관(Independent Authority for Fiscal Responsibility: AIReF) 수립

- AIReF는 스페인의 독립재정기구로, 총 정부(General Government)의 예산집행, 공공부채 및 지출규칙에 대해 보고할 법적 권한이 있음.
- 그 외 스페인의 경제 전반을 전망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등 스페인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한국의 KDI, 국회예산정책처

3. 개혁의 동기부여: New Law on Financial Stability (2012)

□ 새로운 재정개혁의 두 가지 주요목적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거버넌스 도입, Fiscal Rule임.

-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단위의 정부에 대해 재정규칙을 적용
- 정부별 부채비율 한도는 중앙정부 44%, 지방정부 13%, 지방자치단체 3%이나 여러 경제사회 충격에 대응하면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지출을 통제해야하는 상황이니, 부유한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운용에 상당히 제한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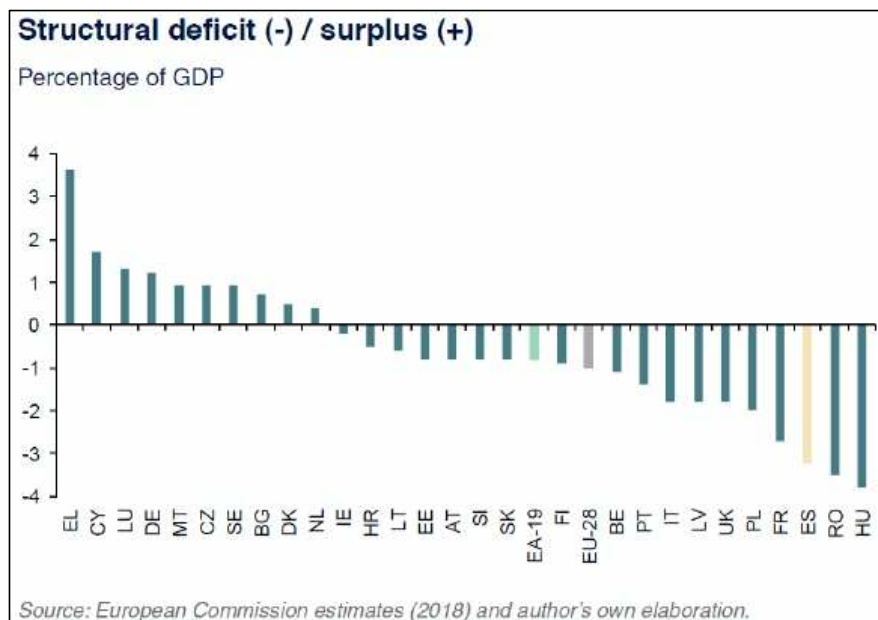
- 지방정부별 재정상황이 매우 상이

□ 유럽연합위원회에 의하면 스페인은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Deficit)가 EU내에서 세 번째로 큰 국가임.

- 2015-2019년의 진행 상황으로 보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며, 재정규칙에 의해 조정되기에는 너무 큰 재정적자임.
- 이러한 스페인의 구조적 적자의 주요 원인은 지출 초과보다는 수입 부족에 있음.

-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입 > 지출'을 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할 것
- 스페인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과 재산세 비중 측면으로 보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소비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의 기여도는 모두 평균 이하

[그림 3] EU회원국의 구조적 재정적자



자료: ESCI -.Universitat Pompeu Fabra 대학교 세미나 발표자료(2022.09.22.)

질의-응답

Q. 새로운 재정규칙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발이 매우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타협하는지?

A. 사실상 지방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재정규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딱히 제지를 할 수는 없으며, 지방정부들의 자체적인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다.

Q. 스페인의 경우 교육, 의료분야에 대한 지출을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계획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이 정부부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A.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방정부에도 지출한도가 잘 적용되어야하지만, 재차 언급했듯 잘 지켜지지 않아 통제가 쉽지 않다.

- Q.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 재정개혁을 통해 얼마나 건전성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지?
- A. 개인적으로 재정규칙을 통해서 기존의 재정상황을 개선시키기에는 정부부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하며, 해당 원인을 수입부족 이라고 생각한다.
- Q. 재정적자의 원인이 세수 부족이라기에는, 세율이 OECD평균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
- A. 세율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다. 세율은 EU평균과 거의 유사하나, 세수 규모 자체가 작다. 그 이유로는 각종 만연한 감면제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브레인스토밍] 한국형 재정준칙의 성공적 도입 및 실효적 운용에 주는 시사점 9월 22일(목) 14:30~16:30

1조(스페인의 재정건전성)

□ 코로나 19 이후의 재정악화

-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재정건전화를 꾀했던 국가임에도 일반정부부채가 약 120%대까지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임.
- 코로나 19 이외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향후 에너지 가격 인상이라는 또 다른 경제 충격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 보다 강경한 대책이 필요해보임.
- 현재 재정악화와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해 스페인 산업계 혹은 일반국민들은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겼음.
 - 관광수입이 주를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공공재정운영에 대한 관심이나 심각성이 낮지 않을까 생각됨.

□ 재정악화의 원인

- 스페인 재정악화의 원인은 당연히 코로나 19 대응책으로 인한 지출증가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지출초과보다는 수입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구체적으로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수입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무분별한 비과세 제도로 인한 것임.
- 저출산·고령화로 미래의 수입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입 창출뿐만 아니라 지출효율화도 함께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됨.
- 미래의 세수 부족은 우리나라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음.
 - 부가세 및 소득세율 인상이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세·설탕세·디지털세 등의 새로운 세원창출도 고려해야함.

2조(스페인과 EU의 재정준칙)

☐ EU의 재정준칙

- 지표에 대한 기준(국가채무 60%, 재정적자 3%)으로 구성된 재정준칙이라 행정적인 소모비용은 매우 적을 것 같아 비용측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임.
- 취지는 좋으나 지키는 국가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재정준칙이라고 생각됨.
- 많은 국가들의 재정상황과 수입지출구조가 다른데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임.
-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준칙의 적용을 유예할 수밖에 없고 이후 회복국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대국민 설득이 필요

3조(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

☐ 우리에게 맞는 재정준칙

- 현재 상황으로 보아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보다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재정준칙은 지출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이나 일반국민들의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지출 효율화 과정의 저항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
- 우리나라의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을 잘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경제전망, 재정전망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진단이 필요함.

☐ 재정준칙 도입 시 우려되는 사항

- 지방정부에의 적용 방안도 고민해야 하겠으나 우선 중앙정부의 채무 관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 지출효율화의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내재화 되어 있는 지출검토를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세입증가를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최대한 다양한 방안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임.

방문기관 : 카탈루냐 총국 경제 재정부

9월 23일(금) 9:30~12:00

주제 1: Catalan Economy: The Strength of an Innovative and Outward-looking Nation
(Ms. Martha Curto - Director General for Analysis and Economic Forecas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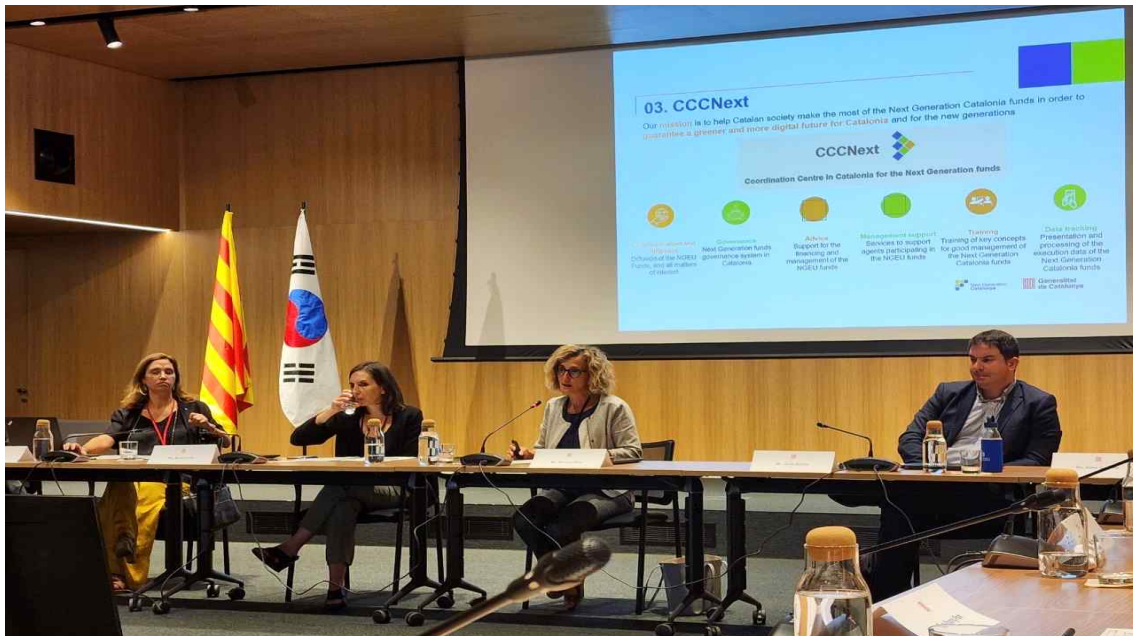


스페인 카탈루냐 정부 경제 현황

- ☐ 카탈루냐 정부는 바르셀로나를 주도로 한 오랜 전통적 산업과 함께 다양하게 세분화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로, 지중해, 내륙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위치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음.
- ☐ 카탈루냐 정부는 스페인 전체 GDP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며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 스페인 인구의 16.3%를 차지하는 카탈루냐 지방의 GDP는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의 총 GDP와 맞먹는 규모로 2014-2019년 평균 GDP 성장률로 보았을 때 독일(1.7%), 유로존 평균(1.9%)과 비교했을 때 높은 2.8%의 수치를 기록함.
- ☐ 카탈루냐 지방의 수출은 스페인 전역의 25.4%의 비중을 차지하며, 서비스업, 화학분야, 자동차 산업 및 기계 장비 수출이 큰 부분을 차지함.

- 2014년부터, 일반 수출기업 규모는 8.3% 증가하였고, 2020년 팬데믹으로 약간의 하락이 있었으나 2021년 7,551개의 회사들이 50,000 유로 가치의 수출을 기록하는 등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꾸준한 수출실적을 기록 중에 있음.
 - 2009년부터 수출이 확연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며 2021년 세계 무역 암흑기에도 카탈루냐 지방의 재화와 용역 수출은 13.8% 증가함.
 - 수출강국인 네덜란드와 독일을 제치고 EU 국가들 중 4번째로 높은 foreign balance 순위로 세계 시장에서 높은 자금조달력을 보유함.
- 최근 디지털 경제에 기여하는 역동적 생태계를 제공하며, 여러 다국적 기업들의 디지털 허브로서의 본부역할 수행 중
- 2022년 기준, Schneider Electric과 Boehringer Ingelheim이 바르셀로나에 자사의 새로운 디지털 허브 런칭 발표
 - Google이 바르셀로나에 새로운 본부를 열며 일자리 창출, 한국 배터리 부품 기업이 ILJIN Material이 카탈로니아 지방에 투자 및 공장 오픈
 - 2011년부터 바르셀로나는 Mobile World Capital로서 디지털 경제 임무 수행 중
 - 2014년 이래로 유럽 위원회와 ITC 산업의 5G 사업 전체 중 20% 카탈루냐 지방에 배당
 - ICT 분야의 학술적 지원: UPC, ESADE, UPF 등
- 2022년 2분기 카탈루냐의 GDP는 확연한 성장을 이루어 냈으며(1.5%), 팬데믹으로 막혔던 여러 산업들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성장 기대
-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해외 관광업이 이동제한조치가 완화되며 서비스 분야(숙박, 레저 등)의 회복세로 회복 중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공급체인에 병목현상이 생겨 경제 성장이 더뎠으나, 2분기 카탈루냐 지방의 GDP는 유로 지역에서 아주 높은 축에 속하며, 2019년 4분기의 GDP 1.1% 밑으로까지 회복되는 추세

**주제 2: How is “Next Generation Fund” helpful to overcome COVID-19?:
Any other sugg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atalunya
(Ms. Mariona Sanz, Director General for European Funds)**



□ Next Generation EU: RRF 와 REACT-EU 소개

- ‘Next Generation EU recovery plan’은 코로나-19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처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유럽을 재건하는데 의의가 있음.
- 유럽연합 출범 이래 최대 규모 배당 예산으로, 총 예산의 2/3는 보조금으로 1/3은 대출로 지급
- ‘RRF(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유럽 경제사회를 좀 더 지속가능하고, 충격완화적인 시스템으로 만들며 녹색,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정 시스템: 녹색 전환(green transition),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 산업부흥(reindustrialisation)
- ‘REACT EU’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위기 대책을 지속, 연장하는 새로운 계획(new initiative): 고용 프로그램, 보건, 사회 서비스

□ Next Generation EU 재원

- 유럽 연합의 Recovery Fund 총액 중 41%에 해당하는 Next Generation EU(NGEU) 총액 €750 Billion 중 €47.5 Billion은

REACT EU에 €672.5 Billion은 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에 각각 배정

- 이중 스페인(REACT Spain)에 배당된 금액은 €12.436 Billion(21%), RRF Spain에는 €140 Billion(17%) 배당
- 카탈루냐의 REACT-EU funds : 자치 정부(21-22)에 €1.7 Billion, 보건부 자치정부: €241 Million, 2022년 추가 지원 €86.7 Million
- 카탈루냐의 RRF funds : 2021년 €24.198 Billion, 2022년 €25.033 Billion

□ 카탈루냐의 REACT-EU funds는 보건, 교육, 고용, 기본 사회권(Social rights) 네 개의 핵심 분야에 배정됨.

- 노동: 청년층 취업 보조, 실업자 고용 보조 및 교육, 실업자들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녹색, 케어 분야 교육
- 교육: 교육 분야의 전문가 채용 모집, 교육 분야 디지털 및 녹색 전환
- 기본 사회권: 장애인 보조 사회경제 프로그램
- 보건: 보건 분야 전문가 채용 모집 등

□ 카탈루냐 RRF funds는 €2.65Billion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2022년에는 기본 사회권, 교육, 노동 및 사업, 기후 대처, 보건, 리서치와 대학교, 사법 순으로 예산 배분

- 교육의 디지털화, 아이돌봄, 주거 재건, 에너지 사용 빌딩 재보수, 에너지 효율 및 수질 개선 등으로 14개의 부서 중 12개의 부서가 보조금 수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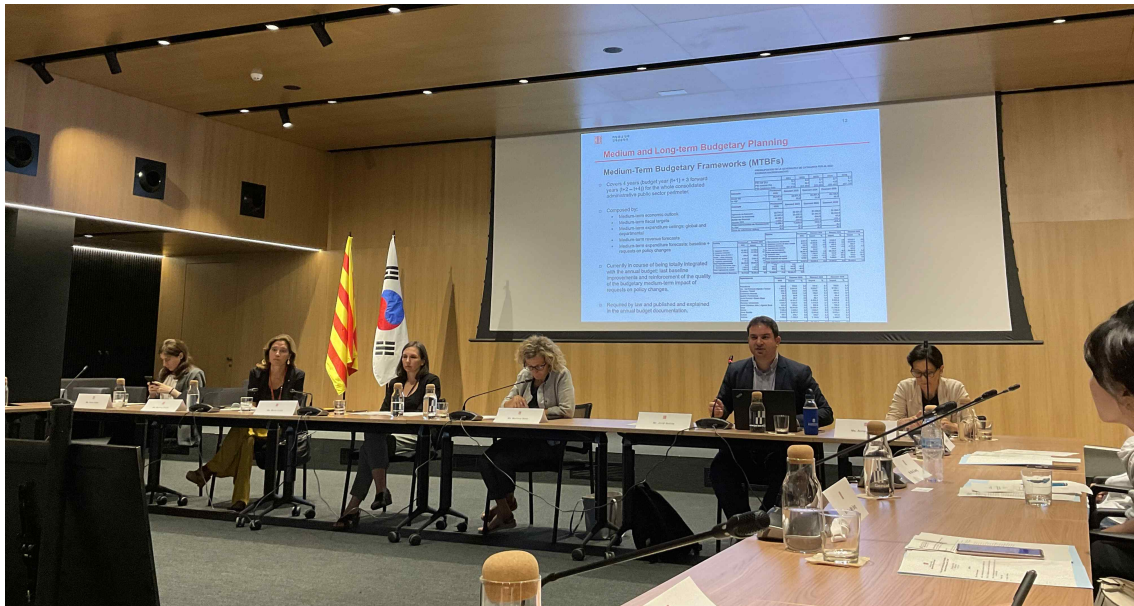
□ 2022년 Next Generation 보조금 재원 지원 계획

- 친환경 시스템과 생태계 보존, 관광업, 문화사업, 디지털 연결고리 생성 등 기조에 맞춘 사업들 선정 및 보조 계획

□ CCCNext(Coordination Centre for Catalonia for the NEXT Generation funds)를 설립하여 사업의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 기술적 조언, 사업 참여 독려, 훈련 및 데이터 트래킹 서비스 제공

- 자치 단체들의 간의 다단계 협업 시스템 부족, IT 관리 도구 부족, 자원의 원활한 분산, 사업 실행 지연 등의 문제 해결 필요

주제 3: The Budgetary System of the Catalan Government
(Mr. Jordi Baños, Director General for Budget Policy Expert)



□ 카탈루냐 정부의 재원 조달 시스템

- 다른 국가, 지방정부 등과 같이 세입, 자본 이전, 부채, 기타로 이루어져 있으며, 50%의 임금소득과 부가가치세가 주된 세입원
 - 카탈루냐 지방 고유의 세금 중 2017년부터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가 현재 스페인 전역에 제도로 자리잡음. 그 외에도 빈집세, 방사성 물질이 환경에 끼치는 위험에 대한 세금, 관광 도시세 등이 있음.

□ 카탈루냐 정부에 적용되는 재정규칙들(Fiscal Rules)

- 유럽 연합 규제 체제: 회원국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 국가부채는 GDP의 60% 이하 유지
 - 코로나-19로 2020년 3월부터 적용 유예 중
- 스페인 Organic Law(2/2012)에 구조적 적자는 0, 공공부채는 GDP의 60% 내외(지방정부 13%→현재는 25%)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수치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카탈루냐 2022년 예산

- 카탈루냐 정부의 모든 공공분야 지출: €42,169Million(카탈루냐 GDP

의 18%), 2022년 말 예상 공공부채: € 84,447(카탈루냐 GDP의 33.8%)

- 비-금융 수입: € 37,806M, 비-금융 지출: € 42,169M

- 카탈루냐 정부 지출 보건(€ 11.215M), 교육(€ 7.738M), 지방정부 금융 지원(€ 4.351M), 사회 안전망(€ 3.110M), 교통(€ 2.999M)의 순
- 카탈루냐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때 - 2.9%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2011년 5.4%의 최대 수치를 찍은 후 실적이 점점 좋아져 2021년에는 - 0.3%의 재정적자를 기록함. 호전된 수치는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 감소에 기인

□ 카탈루냐 정부의 Performance Budgeting 공개

- 현재 대중들에게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제공하는 Program Performance 타겟 리포팅은 통계 프로그램에서 그림으로 쉽게 확인 가능하며, 포괄적 내용을 담은 2022년 성과 리포트 곧 발행

□ 중-장기 예산 계획(Midium and Long-term Budgetary Planning)

- 중-장기 예산 프레임워크(MTBFs)
 - 통합된 행정 공공부문의 4년 예산을 다루며, 연별 예산 문헌에 출판되며 설명되어 있음
 - 중기 경제 전망, 중기 재정 타겟, 중기 지출 상안, 중기 수입 전망, 중기 지출 전망(베이스라인+정책 변화) 로 구성되어 있음.
- 기출기준 예산(Baseline budget) 전망
 - 초기 여유 재정 분야 식별, 지출 한도 설정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 예산 요청에 대한 주요 참고자료로 사용
 - 계산 근거: 임금 인상 및 인플레이션 조정, 지출의 연차화, 일회성 지출 제거, 특정 지출의 워크 로드 조정
- 장기 예산 전망과 재정 지속 가능성 리포트
 - 2019년 첫 리포트로 'long-term budgetary impcat(2018-2030) of demographic-sensitive spending) 출판
 - 2022년 좀 더 완전한 분석과 리포트 발행 예정: 재정/부채 지속가능성 분석, 수입과 수출 장기 예측, 인구고령화 지출 포함

□ 예산 모니터링 및 제어 방식

- 예산 수정관리 -> 수정 분석과 리포트 발행+감사관실 관리
- 다년 지출약정관리 -> 다년 부서 지출한도 적용+승인 관리
-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제시
- 예산 집행, 산출량 예측 및 재정 위험 모니터링
- 예산 실행 보고 및 데이터 시각화

□ 예산 결과

- 연별 재정 리포트 발간
 - 재정 예산 결과 보고서(재정 규칙, 상태)
 - 개별 및 통합 예산 재무정보 및 데이터(대차대조표, 순자산, 현금 흐름 등)
 - 연차 계정 보고서 및 설명
- 프로그램 성과 보고
 - 실질 성능 vs 예산 성과 측정
 - 포괄적 프로그램 성과 보고서(2022년 예산 결과보고를 위해 발행될 예정): 성과결과와 사용된 자원들에 대한 분석에 대한 설명

□ 카탈루냐 정부는 2017/2018에 스페인 최초로 'Spending Review' 발간

- 목표: 프로그램 효율성/성능 향상을 통한 절세 -> 절약되는 부분 해당 부서에 재투자
- 예) (시범 사업) '교도소 프로그램(€399M)'
 - 사업 시행 비용(스태프): 1,877시간 (€63,066)
 - 결과: 35 부문에서 개선여지 발견하여 정량적 절약(2018-2035)은 프로그램의 5%까지 절약 가능하게 됨, 같은 부서에 다른 분야로 재예산 분배해서 해당 부서 예산을 늘릴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 수정 가능
- 현재는 잠정 중단이지만 후속 프로젝트로는 부동산, 스포츠 장려 프로그램을 생각 중이며, 2023년에 다시 시작되길 기대

질의·응답

- Q. 카탈루냐 Next Generation 기금에서 직접 투자한 사업들 몇 가지만 알려달라
- A. Alba Synchrotron 케이스: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3세대 싱크로트론 광원 시설로 2021, 2022년 각각 €7.5m, €9.9m을 싱크로트론 광원 랩실 구축, 장비, 운영에 투자한 케이스가 있다. 2BSC 와 University Services of Catalonia Consortium(CSUC)에 €2m를 투자해 양자컴퓨터 프로젝트 연구개발에 투자한 케이스도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 학계들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바르셀로나 시의회에 €9.3m을 투자하여 빈곤퇴치와 더불어 사회적 통합, 평등을 위한 사업들에도 투자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Next Generation에는 포용(Inclusion)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 Q. 15년 뒤 카탈루냐 정부가 겨냥하는 정부 부채율(GDP 대비)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있는가?
- A. GDP 대비 18%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아직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 Q. Health care spending이 15년 뒤 인구 구조에 민감하고 장기재정 전망에 많은 부분이 바뀌나?
- A. 노령화는 중기, 장기 예산 추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자율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현재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 데이터들을 추적하며 우리팀에서 열심히 분석하고 있으니 보고서가 나오면 보내주겠다.

**[브레인스토밍]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Next Generation Fund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9월 23일(금) 14:00~16:00



- Next Generation Funds의 기조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면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더 나은 세대의 유럽을 만드는 데에 있음.
 - 스페인의 국가 보조금 할당액(€69.5b)은 2019년 전체 RRF의 9.6%, GDP의 5.6%에 해당하는 액수로 2022년 6월에는 €77.2b로 상향조정됨.
 - 유럽의 Next Generation Funds는 녹색 성장, 디지털 전환, 산업재부흥이 키워드로, 타국 및 한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건사업과의 차이점을 비교
- 스페인의 경우 10개의 정책 분과와 30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회복, 전환, 회복력을 갖춘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건물 및 인프라의 대규모 혁신과 순환경제 투자
 - 대도시 및 도심 지역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결, 주택 재건축 및 농식품과 수산업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 생태계 생물 다양성 보존 및 복구
 - 재생 에너지 구현 및 통합
 - 전기 인프라, 스마트 네트워크 촉진

- 공공분야 행정의 근대화
 - 중소기업 성장 촉진, 관광업 분야의 현대화 및 경쟁력 제고
 - 사이버 보안 및 5G 구축
 - 차세대 지속가능한 시스템 개혁
 - 국가 과학 기술 혁신 시스템의 제도 개혁과 역량강화, 국민건강시스템 역량강화, 국가 인공지능 전략 재고
 - 디지털 기술을 위한 직업 훈련 전략 계획
 - 조기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
- 한국에는 유럽연합의 'Next Generation Funds'와 같은 국가 예산안 외 수여받거나 공유하는 보조금은 없으나 코로나-19 이후 극복과 미래대비에 투자하는 2022년 예산안 중 비슷한 부분과 보완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봄.
- 2022년 예산안의 핵심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도약'으로 미래 대비 투자 분야가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 및 재도약 지원을 위한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소실보상비 포함 등
 - post-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구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2.0 지원
 -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도 시범도입예정
 -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생태계 강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산업에 투자, 녹색전환, 그린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 사업 투자, 유아 및 청년들을 위한 휴먼 뉴딜 산업에 투자
-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Next Generation Funds의 경우 다음세대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개선방향을 기조에 두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를 중기시계에서 설정하는 정책들로 보임. 단기적인 성취도 필요하나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하는 방향으로 먼저 큰 틀을 잡는 것도 좋은 방향
- 유럽 연합의 녹색 성장,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한 투자 등은 실제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예산기조(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인프라, 사회적 통합 등)와도 비슷하며 이는 전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조로 보임.

- 한국의 경우에도 D.N.A(Data, Network, Ai)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회복전략으로 '디지털 역량'을 국가 경쟁력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가 있음.
- 예를 들면, '디지털 전환' 속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층들에 대한 재교육 투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며 즉각적인 효과는 없음. 그러나 사회 통합과 포용 성장(카탈루냐 정부에서도 강조)이라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실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
- 2022년 예정된 Next Generation 카탈루냐 사업에도 디지털 소외계층의 융합을 위한 사업들이 실제로 계획되어 있음.
- 녹색 전환을 위한 투자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완화, 생태계 보전 등의 목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야한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실행하려는 사업들에게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를 상기시키는 기조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로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장기 목표 설정만 한 채 지자체들의 구체적인 단기 실행방안과 현실가능성이 없어보인다는 답들로 미루어 봤을 때 Bottom up 방식이 좀 더 실효적으로 보임.
- 투자 병목 해결을 위한 국가 및 지역 단위 공동 프로그램 개발로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시키는 것도 방법

□ 보완점으로는 카탈루냐 정부를 비롯, 녹색성장을 기조로 하고는 있으나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들이 목표한 수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현실성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답변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의 마비 현상을 비롯해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먼저 대비하며 유연하게 수치 조정 및 장기 목표 보다 단기 목표를 먼저 위주로 설정하여 구체적 녹색성장 실행 방안 제시 필요

강연 :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9월 24일(토) 09:30~10:30

주제: 한국의 장기재정전망과 재정여력 확보방안



- 한국의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의 방향성은 (새정부 재정정책 기본원칙)재정준칙,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국정목표1-국정과제05)에 있음.
 - (지출효율화) 저성과·관행적 보조사업 정비, 코로나 한시사업 정상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추진
 - 의무지출·경직성 재량지출 사업도 상시·제도화된 구조조정 시행
 -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재원조달 다변화) 정부예산 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개발·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정책 뒷받침
 -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 핵심사업을 통합관리하는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저성과 사업에 대한 예산환류 강화
 - 2019년 국가채무비율 급증하여 2020-2024 중기계획에서는 정점을 찍고 2021년 세수호조로 소폭 개선이 되었으나 2022-2026년 중기 계획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
 - 2025년 국가채무비율 58.8% -> 51.4%로

□ 재정 전망 및 장기 재정전망

- (KDI 2021년 전망결과) 현행 유지시 인구 고령화에 의해
 - 2060년 총수입 비율 23.1%수준으로 축소
 - 총지출 비율을 35.2% 수준으로 확대
 - 국가채무비율은 144.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건전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
 - 고령인구비율 높을수록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경향,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여전히 고령인구 비율은 OECD 평균 하회

□ 재정건전성 위협 요인에는 (1)재량지출 통제 실패 (2)부담 확대 없는 복지 확대 (3)인구구조 저위 기준 실현

- (KDI 2021년 전망전제) 2026년부터 재량지출 지속 축소되어 2030년 코로나19 발생이전 수준인 2012-2019년 평균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중 11.8%로 복원
 - (KDI 2021년 전망 전체 미충족) 2026년 이후 재량지출 축소 가정 충족되지 않고 2026년 계획 14.7% 유지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 230.9%로 기준선 대비 86.1%p 급증 -> 재량지출 통제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 OECD 평균을 하회 -> 중복지(OECD 평균)를 지향
 - (복지확대 목표 설정) 1차 목표: 18.3%(OECD 2005년), 2차 목표: 23%(2040년) 달성
 - (소요재원) 1차 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GDP의 15.9% 필요하며, 2차 달성을 위해 35.4% 필요 -> 추가적인 증세 없이 복지만 확대할 경우 국가 채무 급증
- (KDI 기준선 전망 전제) 통계청 2019년 발표 장래인구 추계 중위를 기본 전제했으나 저위 실현가능성 높음 -> 2060년 노년부양비 6.1%p 증가, 206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 0.8% 축소
 - (KDI 2021년 전망 전체 미충족) 국가채무비율 2060년 170.2%로 기준선 대비 26.6%p 확대되며 추가 악화

-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는 (1)지출효율화 (2)세입기반 확충 (3)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
 - (재정지출 추가 통제) 교육재정교부금 개선과 함께 재량지출의 경상GDP 대비 비중을 2012-2020년 본예산 기준 최저수준 11.1%로 축소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106.6%로 교부금 개선 대비 10.1%p 추가 축소 가능
 - 2031년부터 11.8%에서 11.1%로 매해 7/300%p씩 경상GDP 대비 비중 축소
 - (향후 증세 대상 세목) OECD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수확대를 통해 조달
 - 한국의 경우 3대 세목의 세수 비중이 GDP 대비 4.3~4.8%
 - 2019년 한국과 유사한 노년부양비를 보인 OECD 국가들의 경우 조세왜곡이 심한 법인과세를 강화하지 않음(GDP 대비 소득세수 7.8%, 소비세 6.8%, 법인세 3.3% 수준)
 - (지출 통제 기전 필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출 통제 기전 마련할 필요
 - 재정수지, 지출총량, 채무수준에 대한 법적 한도를 설정할 필요
 - (현상태) 2016년, 2021년 정부안 제출했으나 실패함.
 - 정치적 수용성이 낮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수반 법률의 발의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지출 통제 기제는 도입될 필요
 - 다만 지나친 제약으로 탄력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 판단은 의회의 일반 다수결표결의 형태로 결정

**[브레인스토밍]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예산당국, 국책
연구기관, 국회의 역할**
9월 24일(토) 11:00~12:00

□ 우리나라 예산당국의 재정준칙 도입 역사와 현황

- (예산당국) 2016년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재정건전화법’
 - GDP 대비 채무비율 45%이하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등 명시된 법안을 통해 명문화를 처음 시도
 - 국회에서 논의 이루어지지 않은채 폐지
 - (예산당국) 2020년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 GDP 대비 채무비율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 3% 준칙 포함
 - 관리지표: 통합수지 + 국가채무
 - 여당은 준칙 도입에 대한 반대, 야당은 준칙 기준이 약하다는 이유로 반대
 - (정부) 2022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 국가채무 수준 GDP 대비 50% 중반 수준, 연간 재정적자는 3% 이내(채무 60% 초과시 재정적자 2%)에서 관리하겠다는 재정운용 기조 발표
 - 관리지표: 관리수지(국가채무) -> 보다 실효적 관리를 위해 지난 정부 준칙안 보다 단순한 형태
 - 2020년 개정안은 시행령 조항이었으나 현재 정부안은 법으로 규정
 - 급박한 경제사회 변화 등 위기 시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유지
- 재정 건전화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운용의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운용이 필수적
- (예산당국) 적극적인 세출구조 조정이 필수적이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

- 정부의 예산은 확정된 이후 그대로 집행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과정에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지출검토 과정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
 -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 정책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이슈 고려
 - 지출분야 간 우선순위 및 적정 규모의 설정을 위한 유연성 확보
- (국회)재정준칙의 도입의 법제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주어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회적 합의 도출을 주도할 필요
- 2022년 기준 재정준칙을 수립한 국가는 105개국이고,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재정준칙을 운용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3번째로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음.
 - 2016년과 2020년에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입하지 못했던 사례를 고려하여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
 -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 중 세입기반 확충과 같은 정치적 부담이 큰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음.
- (국책 연구기관) 우리나라 장기 재정여건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에 기여할 필요
- 재정건전화 관련하여 꾸준한 연구 및 정책적 조언 필요
 - 예시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지출효율화의 한 방안으로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제시(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 지속 감축 가능하고,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144.8% -> 116.6%로 추정) (김학수, 2021)¹⁾
 - 재정준칙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실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정여건을 전담하여 분석하는 독립재정기구의 신설도 고려할 필요
 - EU 국가들의 경우 재정건전화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도입 및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독립재정기구(Independent Fiscal Institute)를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

1) 김학수, 「장기재정전망과재정여력확보방안」, 김학수편저, 『코로나19 이후조세재정정책방향의재검토』, 연구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21

방문기관 : 재정연구원(IEF)

9월 26일(월) 09:30~12:00

주제: The Procedure and Effectiveness of Spanish Spending Review
(Mr. Ignacio Moral Arce, IEF 자문위원 겸 UNED 조교수)



1. 평가(evaluation)의 기원

□ 평가의 목적은 ‘공공 프로그램 개선’

- 평가이유 1 의사결정 및 학습: 정부가 경험적 증거를 갖도록 지원
 - 정책이 당초 제안된 목표를 충족하는지 확인
 -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
 -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모색
 - 지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
- 평가이유 2 책임성: 시민과 사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다양한 정책에 투자된 자원이 얼마나 투명하게 투입되는지
 - 행동의 결과

- Private Sector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개입이 필요함.
 - 현상분석 -> 전략수립 -> 전략실행 -> 평가
 - 장점이자 단점은 이러한 과정이 끝이 없다는 것임.
- 평가를 위해서는 정량적/정성적 방법론을 모두 활용해서 객관적/주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문제 인식 (우리가 답하고자 하는 혹은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 데이터 정보 -> 방법론 -> 증거 -> 제언
 - 공공개입을 위해 중요한 세 가지 항목: 지속성/연관성 (Consistent/Relevance), 효과성(Efficient), 효율성(Effectiveness)

2. 평가의 배경

- IGAE(General Comptroller of the State Administration), 재정연구원 (nstitute for Fiscal Studies: IEF), 독립재정기구(AIReF) 등 많은 기관에서 평가를 수행하지만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음.
- 지출에 대한 평가의 뿌리내리기가 필요: 공식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향력을 도출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함.
- 현대적이고 전문화된 공공기관평가에 대한 실패: 스페인 공공정책평가기관(Spanish Agency for the Evaluation of Public Policies: AEVAL)
 - 2012년 행정개혁위원회(Commission for the Reform of Public Administrations : CORA) 발족으로 초기 추진력 중단됨.
 - AEVAL은 2017년 IEPP(Institute for the Evaluation of Public Policies)로 전환될 때까지 41건의 평가를 수행했으며 이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 2017년까지 AEVAL은 개발협력, 환경, 고용 등과 같은 분야에서 35개의 사후평가를 추가로 실행한 바 있음.
 - 문제점: 독립성 결여, 편향된 접근, 평가를 수행하는 다른 조직과의 위계적 관계 등
-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이전 스페인의 공공기관평가 문제점

-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분석하는 문화가 없음.
- 명확한 결과에 대한 지향성이 없어, 이러한 분석은 예산편성관성을 깨고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지출을 감소하게끔 도와주지 않음.
- 다양한 방법론적 문제
 - 평가된 정책의 특성에 맞지 않는 방법론 및 도구
 - 다른 평가 방법론의 조합 부족
 - 정성적: 체계적인 리뷰, 벤치마킹 국제 관행, 전문가 의견
 - 정량적: 행정 데이터, 설문 조사, 시뮬레이션, 영향 평가, 비용 편익 분석
-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절 및 커뮤니케이션 미비
 - 법적인 위임이 없기 때문에 수행된 평가에는 결과(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거의 없음.
 - 평가결과를 게시할 의무가 없음.
 - 미디어 및 소셜네트워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매우 제한된 커뮤니케이션 전략
- 예산과정의 통합성 결여: 예산과정과 개입에 대한 종합적 견해를 제공하고 '계획·평가'의 통합이 필요

3. 새로운 공공 지출 분석 도구의 필요성

- ☐ 스페인 지출검토는 공공지출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 지출의 전략적 연계 강화
 - 효율성 및 효과성 측정 (단, 효율성≠예산절감)
 - 프로그램 정보의 구조 및 품질 개선
- ☐ 스페인 지출검토의 과정
 - 2016. 12. 지출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에 제출된 예산 계획의 업데이트에 대한 약속

- 2017. 04. 2017~2020년 안정 프로그램은 첫 번째 단계가 보조금 및 공공 지원을 포함한다고 명시
- 2017. 06. 향후 3년을 다루는 다년간의 프로세스로 구성, 첫 번째 검토 결과는 2018년 말 이전 제출
- 2017. 06~ 08. 자치단체(지역) 및 중앙정부와 준비회의 개최
- 2017. 09. 재정독립기구(AIReF), 7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실행 계획 제출
 - 1. 전략 및 절차 평가
 - 2. 처방전으로 조제되는 약품
 - 3. 적극적인 노동정책
 - 4. 대학 교육 장학금
 - 5. R&D 인재육성 및 고용가능성
 - 6. 사업 경쟁력 강화
 - 7. Sociedad Estatal Correos y Telégrafos, S.A. (스페인의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 회사)
- 2018. 01. 내각 합의 -> 지출검토 시작

☐ 데이터 문제

- 정보 및 데이터: 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직의 '협력 의무'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주는 것임.
 - 하지만, 접근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이유 없이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경우 존재함.
- 데이터 관리에 대한 목표: 다른 공공기관(Stat. Institute, Taxagency, Bank of Spain 등)과 협약 체결,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는 '보안 센터(Secure Center)' 구축

☐ 지출검토 2단계(Spending Review Phase 2) 2019-2020:

- 재정편익(Fiscal Benefits) (1) <- IEF와 협력
 - 주요 목적은 약 3,000억 유로에 해당하는 13가지 세금 혜택*의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

- 두 번째 목적은 사전적 효과(마이크로시뮬레이터), 사후 평가 또는 국제 벤치마킹에 따라 비교분석이 이루어진 개혁 제안

* 근로소득세, 주택임대료 감면(소유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여금 감면, 공동과세, 기부금 공제, 사회적 성격의 공제(출산, 대가족, 장애), R&D 인센티브, 법인세율 감소, 기부, 부가가치세율 감소, VAT법 20조의 사회적 면제: 건강 및 교육, 금융 서비스 면제, 탄화수소(디젤/가솔린)에 대한 세금 인하

- 스페인 국가보건시스템 (Spanish National Health System: SNS)의 지출
- 채용 인센티브, 교통기반시설

□ 지출검토 3단계(Spending Review Phase 3) 2021-2022:

- 생산적인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금융수단
- 도시폐기물 관리

□ IEF의 재정편익 지출검토 목록

Fiscal Benefits SR Phase 2 (2021-2022)	- 특정 무형 자산의 소득 감소 - 이익이 없는 법인에 대한 특별제도 - 특정 복권에 대한 일부 세금 면제 - 해외취업 공제 - 전문가용 석탄세율 인하
Fiscal Benefits SR Phase 3 (2022-2023)	- 자본 준비금에 대한 할당을 위한 과세기준 감면 - 평준화 준비금 할당을 위한 과세기준 감면 - 영화 제작, 시청각 시리즈 및 공연 예술 및 음악에 대한 전액 공제. - 근로자의 해고 또는 해고에 대한 보상 면제 - 장애연금혜택 면제, 장학혜택 면제 - 단일 지급 방식에서 받는 실업 수당 면제. - 공동 과세 방식에서 한부모 가족으로의 감면 - 65세 이상자에 대한 자본 이득 면제

질의·응답

- Q. Cost-Benefit/Cost-Effective 분석의 한계에는 동의한다. 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제언을 하는가?
- A. 제언을 실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정치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평가팀이 평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발전시킬 여지가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내도록 수평적 단계에서 평가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야한다.
- Q. 경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려면 수치 등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은지? 근거가 없는데, 어떤 것이 보다 좋은지 어떻게 평가하는가?
- A. 근거가 없다는 말은 사실상 변화를 추진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그러한 증거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 분석도 활용해야한다.
- Q. 데이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데이터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 A. 내가 AIReF에 근무할 당시에는 협조를 거의 받지 못했다. 그 당시에는 데이터 없이 국제제도 비교, 실무진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평가했다. 마이크로 데이터가 잘 구성되어있는 한국은 매우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 Q. 평가부서에는 몇 명이 근무하는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 A. 대략 6명 정도 근무한다. 업무가 매우 많지만, 생산적으로 운영한다.

[브레인스토밍]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 방식에 주는 시사점

9월 26일(월) 14:00~16:00

1조(스페인의 지출구조조정 방식)

☐ 지출구조조정의 과정

-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에 매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임.
 -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공공개입의 '문제'로 인식
- 공공개입을 위해 지속성, 효과성, 효율성의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지만, 사실상 효과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임.
 - 효과성은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이 인상적이었음.

☐ 지출구조조정 참여기관

- AIReF는 독자적인 전망 모형 등을 개발하여 장기재정을 전망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해보이며, IEF는 재정부 소속의 연구소로 조세재정연구원과 상당히 유사해보임.
- 우리나라 국회예산정책처 및 조세재정연구원의 정책 평가보고서 결과의 반영률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는데, IEB 및 AIReF 보고서는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어 보임.
- 평가를 받는 기관과 평가하는 기관간의 거리(수평적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2조(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 방식과 비교)

☐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정책 평가

- 국세청 납세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마이크로 데이터 기반으로 해당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측정하는 우리나라의 평가방식과는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임.
 - 발표자가 AIReF에 근무할 적에는 분석을 위한 마이크로 데이터의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고 함.
-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에 사용될 자료를 평가기관에 공급해주는 것이 비교적 협조적임.

- 데이터 분석의 미비, 미흡한 예산환류 체계로 인해 해당 지출검토 과정의 효과성 제고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됨.

□ 평가되는 정책의 선정방법

- 스페인의 지출검토 분야는 AIREF가 주기별로 선정하고 계획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검토의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다소 떨어뜨리는 방식일 수도 있음.
 - AIREF가 2021년 발표한 2022~2026년 지출검토분야는 건강관리지출, 기본소득 및 장애인 혜택, 고용정책 등 6개
- 조세지출규모 등의 수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의무평가 및 임의평가를 하는 우리나라 방식과는 상당히 대조됨.

3조(스페인 사례의 시사점)

□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악화를 개선하는 대책으로 지출검토가 활용될 가능성

- 지출검토가 자리 잡게 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재정악화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봄.
- 오히려 경험한 국가 치고는 대처를 굉장히 안일하게 했다고 생각됨.
 - 지출검토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정량적 분석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음.

□ 관계부처 협조의 중요성

- 우리나라도 관계부처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관행이 없지는 않으나, 스페인의 경우 그것이 매우 심해보임.
 - 이는 행정적으로 매우 악순환이 되는 구조로, 관계부처들이 더 적극적으로 서로에 대해 협조하는 문화를 가져야할 것으로 보임.

방문기관 : AIReF

9월 27일(화) 09:30~12:00

주제 1: AIReF's origin and role & AIReF's legal suppor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Guillermo Rehberger - Analyst at AIReF's Presidential Cabinet,
Diego Pérez - Head of the Legal Affairs Division)



1. AIReF의 설립 배경

- 1997년 유럽연합 국가들은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²⁾을 맺음.
 - 협약의 주요 목표는 통화 동맹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것으로 회원국들은 '마스트리히트 기준'³⁾을 준수하여야 함.
 - 그러나, 통화동맹 이후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유럽 연합 국가들은 높은 적자 및 부채 수준을 보임.
 - 국가 간 재정 통합의 정도가 높아지며 공적 부채의 증가와 금융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간 위험의 전이성이 높아짐.

2) SGP는 경제통화연합(EMU) 하에서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재정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

3)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60% 이하일 것, GDP 대비 재정적자가 3%이하일 것

-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SGP의 재정 협약 이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기로 한 협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 1999년 유럽연합 국가들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71.6%였으나 2012년에는 92.9%까지 증가함.
 - 독일의 경우, 1999년 약 60%에서 2012년 80.7%로 증가
 - 프랑스의 경우, 1999년 약 60%에서 2012년 약 90%를 기록
 - 유럽연합 국가 중 스페인만이 1999년 이후 60% 이하의 부채비율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2010년을 기점으로 60%를 초과하여 2012년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의 부채비율(약 90%)을 보임.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기로 한 협약의 경우, 2012년 기준 독일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행하지 못함.
 - 1999년 유럽연합국들은 2%이하의 재정적자 비율을 달성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2008년 이후 유럽 대부분의 국가의 재정적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됨.
 - 특히, 스페인의 경우 2007년 재정흑자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11.3%의 재정적자를 기록
 - 2010년 이후,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스페인은 2012년에도 11.6%를 기록
- 위와 같은 이유들로 재정 안정성을 위한 협약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며 2011년 Six-Pack이 발효됨.
 - Six-Pack은 2010년 10월에 27개의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의회가 승인한 5개의 규정과 1개의 지침으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 12월 13일 시행됨.
 -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⁴⁾)에 놓여있는 23개국의 회원국들로 인한 경제 및 금융 위기에 대한 조치로 금융제재, 수준 높은 재정지출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

4) Excessive Deficit Procedure

- 국가별 중기 예산 목표(MTO)를 제시하며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중기 성장률에 따라 공공 지출의 연간 성장률을 제한
- 2013년 유럽연합국가들 간의 금융위기 전이문제를 막기 위해 Two-Pack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립재정기관들이 설립됨.
 - Two-Pack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예산계획서 초안 제출 의무와 금융 지원을 받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모니터링을 골자로 함.
 - 위원회가 예산계획서 확정하기 전 미리 검토하여 재정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규정 473조항에 따른 독립재정기구들이 설립됨.
 - 독립재정기구는 국가 및 유럽 연합의 재정 규칙 준수를 감독할 법률적 기반을 가지며, 국가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권리를 가짐.
 - 또한, 경험과 능숙함을 갖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의 재정 정보 등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2. AIReF의 설립 및 역할

- 스페인 규제 프레임워크 및 실행 주요 내용
 - 2011년 9월 - 스페인 헌법 135조 개혁
 - 2012년 2월 예산안정성 및 재정지속가능성에 관한 기본법⁵⁾ 승인
 - 2013년 11월 AIReF 설립에 관한 기본법 승인
 - 2014년 2월 초대 대통령 임명
 - 2014년 3월, 기본법 법령의 승인
 - 2018년 3월, 기본법 제1차 개정
 - 2020년 3월, 현 대통령 임명
 - 2021년 9월, 기본법 제2차 개정
- AIReF는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

⁵⁾ Organic Law of Budgetary Stability and Financial Sustainability

- AIREF는 보고서 발간 의무와 자발적인 의견제시를 통해 재정 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회를 통해 연구 및 평가 활동을 수행
 - 예산 안정의 원칙 보장
 - 예산 주기별 지속적인 감독 및 평가
 - 공공부채에 대한 감시
 - 거시경제 예측 및 대응
 - 공공재정의 질적 향상 도모
- AIREF는 주요 국제기관들과 협력적 관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
 - 유럽연합기구(EU Institutions)
 - 위원회, 유럽재정이사회, 유럽중앙은행, 감사원 등과 소통하며 세미나 참석, 미팅주최, 거버넌스 토론 등의 협력적 업무관계를 유지
 - 유럽 내외의 IFIs(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 기간별 재정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성을 평가하고 회의를 통해 논의
 - 이 외에도 IMF, OECD, 리서치 기관, 대학 등 다양한 기구 및 기관들과 소통 및 협력하고 있음.

주제 2: The European and the National Fiscal Frameworks: Evolution, rules,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
(Lucía Rodríguez - Deputy Director of Public Indebtedness)



□ 재정 프레임워크의 작동

- 회원국들은 유럽연합과 SGP조약을 바탕으로 예방적 수단(Preventive arm)⁶⁾과 교정적 수단(Corrective Arm)⁷⁾을 따름.
- 국가별로는 기본법(Organic Law)에 따라 예산의 구조적 균형, 지출준칙, 부채준칙 등에 따라 관리됨.

□ 재정 프레임워크의 작동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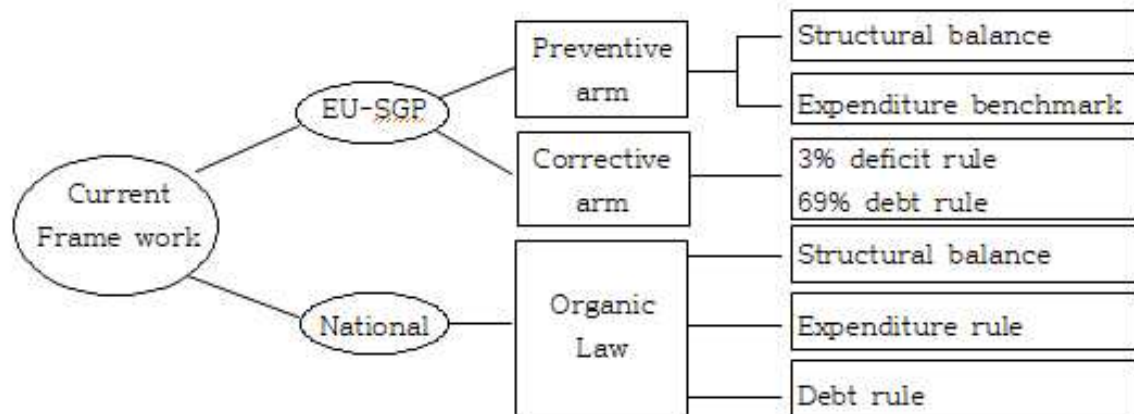
- 구조적 변수들(structural variables)의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에서 명목상 목표(nominal objectives)가 실제로 우세
- 운영변수(operational variable)로써 헤드라인 균형(Headline balance)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존재
 - 소통이 쉽고 공개 토론과 의회 토론에서 잘 확립되었으며 부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짐.

6) 예산의 구조적 균형(Structural balance), 지출 벤치마크(Expenditure benchmark)

7) GDP 대비 부채비율 60%이하, GDP 대비 재정적자 3%이하

- 그러나, 경기 순응성(procyclicality)의 문제를 악화시키며 헤드라인 적자목표(headline deficit target)가 주어지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 조치 시행

[그림 1] 재정 프레임워크 작동 과정



자료: AIReF 세미나 발표자료(2022.09.27.)

□ 재정 프레임워크 개편의 장애물

- 시간적 요소: 부채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제한적 시점을 가진 중기적 비전이 부족
- 준수해야 할 규칙이 많고 복잡
- 국가 및 EU 규칙 간의 충돌 발생

□ 경제 거버넌스 검토에 대한 고찰

- 시간적 측면: 입법부의 합의, 강력한 정치적 약속
- 제도적 측면: 분업
- 물질적 측면

1) 국가별 부채 앵커(debt anchor)⁸⁾ 설정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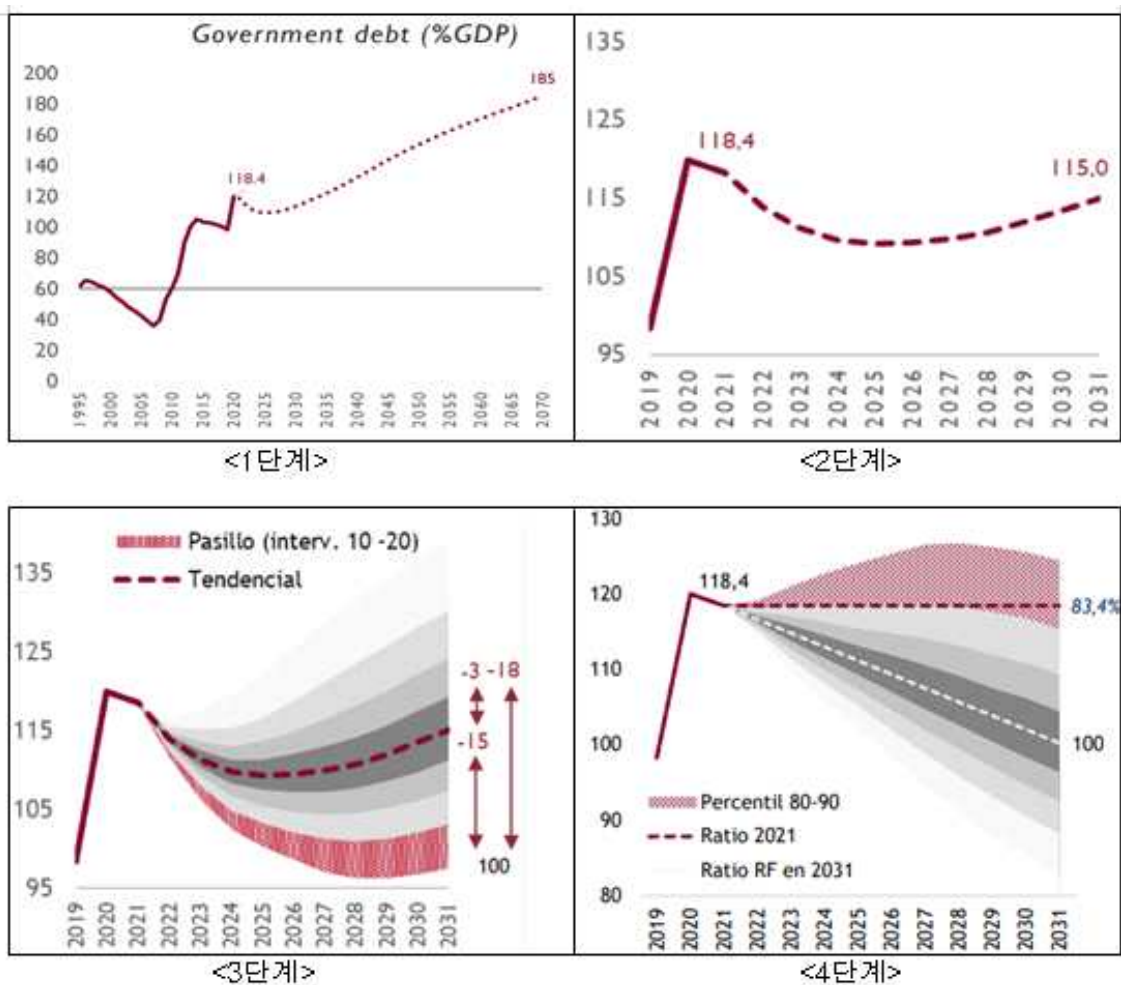
- 1단계: 중기 시나리오(t: t+3) 및 장기 모델링(t+4: 2070)을 중심으로 구축된 GDP 대비 기본 부채 예측

8) 부채 앵커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백분율로 달성하고자 하는 부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규칙을 의미

9) 부채 앵커는 국가별로 시작지점(starting point), 기준 수익과 지출 예측(baseline revenue and expenditure projections), 과거수치를 반영하여야 함.

- 2단계: 부채 앵커를 설정할 기간을 정의
- 3단계: 확률범위(probability bands)에 확률적 분석(stochastic analysis)을 사용하여 앵커를 설정
- ex) 붓스트랩 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재정 VAR
- 4단계: 부채비율이 출발지점보다 높지 않을 확률 확인, 앵커에 대한 확률적 임계값 합의

[그림 2] 국가별 부채 앵커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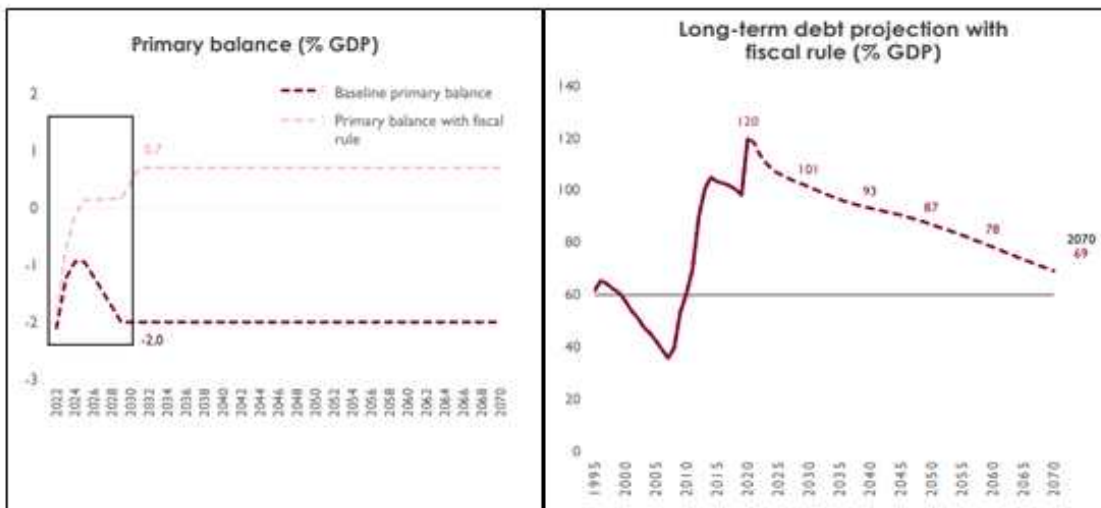
자료: AIReF 세미나 발표자료(2022.09.27.)

2) 운영변수로서의 지출 상한 설정

- 기초 재정수지(Primary balance):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10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수치로 설정

- 국내 자원 동원의 기초 재정순지출(Primary expenditure net of DRMs¹⁰⁾ for (t: t+4)): 부채 앵커와 양립할 수 있는 기초 재정수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정하며 GDP의 0.27pp 가치의 연간 적자 감소 조치
 - 성장률 측면에서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기초 지출 비율 변화율에서 0.7pp 만큼 감축
 - 요약하면, 이 규칙은 기본 기준보다 기초 재정적자를 GDP의 1.1pp까지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는 입법적 합의를 필요로 하며 준수 여부는 지출 수준 또는 성장률을 기준으로 평가
- 3) 새로운 채무유동성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조정(10년 간 매년 0.3pp)은 채무유동성(debt dynamics)과 관련한 이자 지급에 매우 유리한 영향을 미칠 누적 효과를 가짐.

[그림 3] 새로운 채무 유동성



자료: AReF 세미나 발표자료(2022.09.27.)

10) 국내 자원 동원(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은 각국이 자국민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과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금융으로 가는 장기적인 방안임.

주제 3: Macroeconomic forecasts as a basis for fiscal surveillance & A long term fiscal sustainability analysis, a comprehensive approach
(Esther Gordo - Head of the Economic Analysis Division,
Ignacio Huertas - Head of the Budgetary Analysis Division)



1. 재정 감독을 위한 거시경제 전망

☐ 경제현황 추정(Nowcasting)을 위한 주요 분석

- 경제예측: 국내총생산(GDP) 전망과 중기 앵커를 기반으로 한 단기경제 전망
- 실시간 모니터링: “surprise events” 중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시그널에 대한 해석
- 통합된 비전 제시: 모든 수요 측면의 요소를 포함한 경제 전망
- 지역적 차원 분석: 시간적, 횡단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지역 GDP 추정

☐ 실시간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나무

- 추정치와 실제 지표가 다르지 않을 경우
 - 새로운 지표 발표 ⇒ 모델의 예측치와 비교 ⇒ 차이가 없을 경우 발표 수치는 수정되지 않음.
- 추정치와 실제 지표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 새로운 지표 발표 $\Rightarrow$ 모델의 예측치와 비교 $\Rightarrow$ 편차 혹은 서프라이즈 발생(예측치보다 관측치가 크거나 작을 경우) $\Rightarrow$ 모델에서 GDP 및 예측치와 차이를 보이는 관측치 지표 수정

□ 실시간 예측을 위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 지표 발표일과 동일한 날에 해당 지표를 반영한 전망치 발표
-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다 자세한 결과 발표
- 정기적으로 예측평가 실시

□ 수요 측면 접근 방식에서의 통합 프레임워크

- Step 1
 -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지표들의 계절적 조정(Seasonal adjustment)¹¹⁾
 - 표준 동적 요소 모델(DFMs)¹²⁾을 통한 복합적인 GDP 추정치(GDP Trackers)¹³⁾ 생성
- Step 2
 - GDP 추정치를 활용한 연간 지역GDP의 시간적 세분화
- Step 3
 - 체인 링킹(chain linking)¹⁴⁾을 통한 국가 분기별 GDP를 활용하여 횡단적 제약을 통합

□ 코로나19 발발 이후 경제전망모형의 새로운 틀이 필요해짐.

- 코로나19로 이동성 지표와 다른 고빈도 지표들 활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인한 유럽 내 자원공급망 충격으로 잠재적 파급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상세한 프레임워크 사용

11) 계절적 조정은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통계의 주기적 변동이나 수요의 움직임을 고르게 하기 위해 고안된 통계 기법으로 경제 시계열의 잘못된 계절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음.

12) standard dynamic factor models

13) GDP 추정치는 주간 GDP와 위기 이전 GDP 추세 사이의 백분율 차이를 추정된 것임.

14) 체인 링크는 고정 가격에서 서로 다른 연도의 통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체인 링크를 통한 GDP는 올해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작년의 지불가능가격으로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를 통해 가격 효과를 제거하여 물량효과(volume effect)를 살펴볼 수 있음.

2.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분석을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

□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 분석 방법론

	단기와 중기		장기		
투입 요소	거시경제 시나리오	재정 시나리오	인구통계학적 시나리오	거시경제 예측	수입과 지출 예측
방법론	• 이용가능한 정보 • 오류 수정 모델 • 영향분석		• 사망률: 리-카터 모델 • 가우스 곡선 및 자동 회귀 모형 • 인구이동: 중력 모델	• 회귀 모형	• 코호트 모델 • 경제적 가정
산출 결과	포괄적인 재정 시나리오 (T-T+4, 2022-2026)		포괄적인 재정 시나리오 (T+5-2050)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 시나리오				

□ 인구통계학적 시나리오

	사망률	출산율	인구이동
매개 변수	• 연령별 사망률 프로파일 • 사망률 추이 • 사망 연령별 민감도 동향 • 코호트 효과	• 출산강도 • 평균출산연령 • 출산연령 분산	• 이민국과의 관계 • 이민국과 이민 전 국가의 GDP와 GDP 갭 • 이민국과 이민 전 국가인구 (총계, 연령대별, 근로연령별)
모델	• 리카터와 렌쇼 하버만 모형 • 로짓 조정 • ARIMA 모델(트렌드용) • 요인 분석(융합 값)	• 불임 가우스 곡선 • 벡터 자동 회귀 모형 • 요인 분석(융합 값)	• 중력 모형 • 보간법
결과	사망률 및 기대 수명 • 연도별 • 성별 • 연령별	출산율 곡선 • 연도별 • 연령별 • 스페인/외국인 모(母)	• 이민의 국가 간의 흐름 • 스페인으로 이민 • 스페인으로부터의 이민 • 스페인의 순인구유입

□ 거시경제 시나리오 - 생산함수접근법

	중기	장기
명목 GDP	종합적 거시경제 시나리오	Δt 기 노동공급 * Δt 기 생산성 * Δt 기 GDP 디플레이터
노동공급		t 기 인구 * t 기 경제활동참가율 * (1 - t 기 실업률)
실업		2050년까지 유럽연합평균으로 수렴
디플레이터		2% (예측기간동안)
생산성	t 기 생산성 = t 기 실질 GDP / t 기 노동공급	2050년까지 역사적 평균으로 수렴
경제활동참가율	연금 개혁의 영향에 따라 변화	

□ 장기적 수입과 지출

	조세수입		조세지출	
모델 기반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세율조정	연금	- 코호트 모형 - 정책 변경 없음
	법인세	- 명목 GDP - 역사적 탄력성	건강보험	- 코호트 모형 - 정책 변경 없음
	부가가치세	- 명목 GDP - 추정된 탄력성	장기요양	- 코호트 모형 - 정책 변경 없음
	생산세	- 실질 GDP - 추정된 탄력성	교육	- 코호트 모형 - 학교수업률의 수렴
	사회보장세	- 명목 GDP - 추정된 탄력성	실업	- 실업률+물가상승률 - 추정된 탄력성
그 외	명목 GDP 성장 T+4년도부터 예측 종료시까지 GDP 고정 가중치			

... and also evaluation requests from the Spanish Regional Governments

Key:
Completed
In progress
Commissioned

Map callouts (all values in M€):

- Finis and foundations (72 M€)
- Health service: equipment and Human Resources (652 M€)
- Health service & Pharmaceutical spending (565 M€)
- University (250 M€)
- Education (720 M€)
- Subsidies
- Health service, Pharmaceutical spending & Human Resources (1,430 M€)
- Active Labour Policy (130 M€)
- University (1,520 M€)
- Institutionalising evaluation
- Active Labour Policies (41 M€)
- Institutional advertising (11 M€)
- Industrial Policy (420 M€)
- Education (520 M€)

AirEuf Public Expenditure Evaluation Division

-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증거 기반 구조를 가짐.
-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음.
- 평가를 통해 정부는 확장과 긴축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AIREF 평가 결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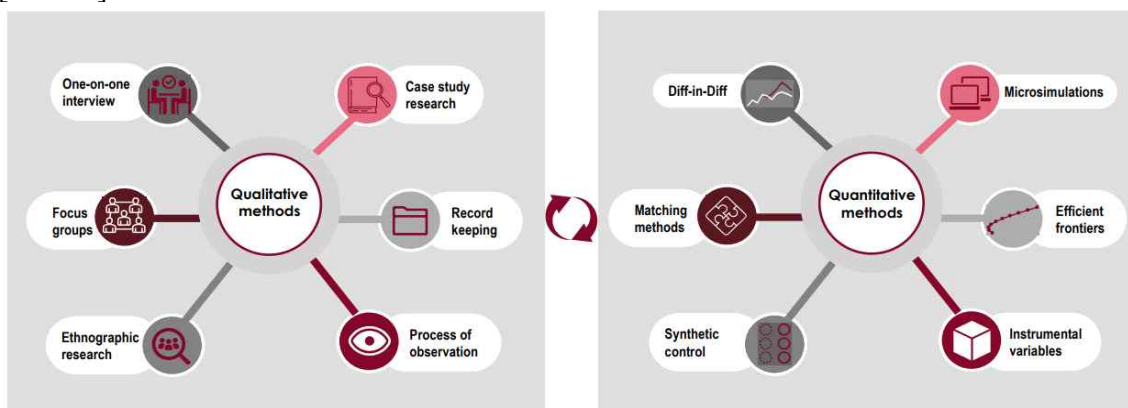
- 정책 실행을 위해 지출된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 공공조치(Public Action) 결과 자료 제공
-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 제시
- 공공 관리(Public Management)의 어려움에 대한 정보 제공

□ AIREF는 스페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로부터도 재정건전성을 위한 평가 요청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 AIREF 평가의 방법론적 접근법

- 여러 데이터 공급자¹⁸⁾로부터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받아 병합하여 관리 및 활용
- 질적분석방법과 양적분석방법을 함께 사용

[그림 4] 평가 방법론적 접근법



18) INE(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BANCO DE ESPAÑA, Agencia Tributaria, SEGURIDAD SOCIAL, TESORERIA GENERAL DE LA SEGURIDAD SOCIAL

□ AIREF 평가의 영향

- 사적 연금제도 및 설탕음료 부가세 인센티브 재설계
- 병원 기술 재고 갱신(INVEAT 계획)
- ALMP의 단순화를 위한 복구 계획의 노력
- 최저 소득 제도
- 3차 교육 장학금 프로그램의 새로운 디자인

질의·응답

Q.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DP)는 무엇인가?

A. GDP 대비 재정적자가 3%를 초과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정적 수단으로 경제제재조치를 가하거나 필요시 벌금을 부가하기도 한다. 해당 국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재정적자 감축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규제를 받게 된다.

Q.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얻는가?

A. 공인된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의 경우, 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AIREF가 재정과 관한 예측 및 전망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보고서도 발행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도 제공받는다.

Q.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여 경제전망 및 분석 등을 하고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A. 5명이다. 매우 능력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하나의 모델을 한 명이 담당하며 휴가나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역을 하는 사람을 한 명 둔다.

Q. 지역경제에 대해서도 재정 및 경제전망 등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기관들과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A. 매우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AIREF의 연구자료가 더 우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역 기관들도 우리의 자료를 신뢰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브레인스토밍] 우리나라에도 재정독립기구가 필요한가?

9월 27일(화) 14:30~16:30

<찬성>

☐ 재정독립기구 신설에 찬성하는 이유

- 정부와 독립되어 온전히 객관적인 목소리로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재정독립연구기관이 필요
 - 국가경제에 중요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의 보안 문제로 데이터 확보가 어렵거나 이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움.
 - AIReF처럼 법적,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할 때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연구를 할 수 있음.
- 국가의 재정지출계획수립 및 집행을 관리·감독할 독립된 기구가 필요
 - 정치적으로 혹은 집단 내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처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한 개혁이 필요
 -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은 매우 중요한 업무임.
 -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어야 재정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반대>

☐ 재정독립기구 신설에 반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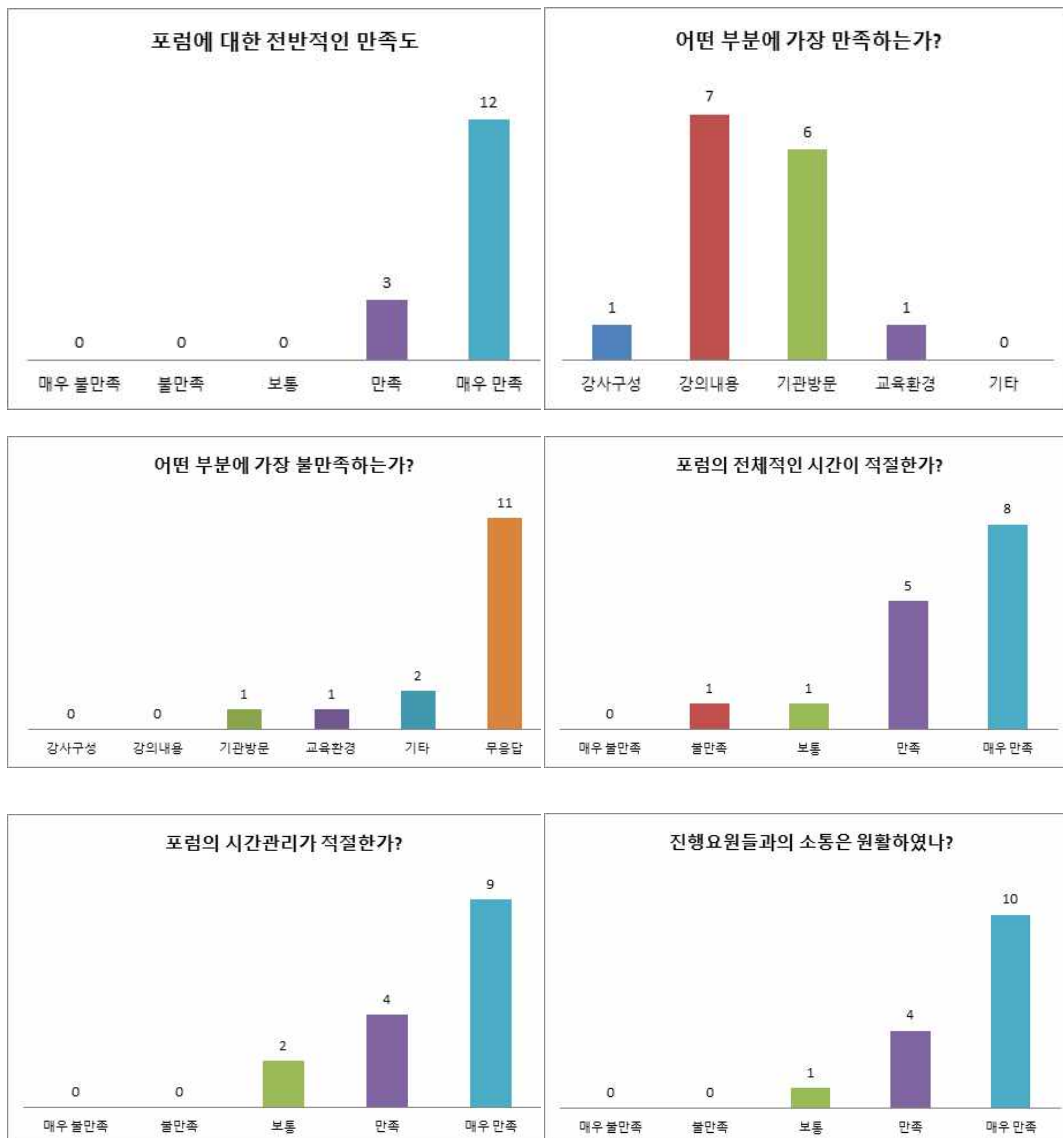
- 한국의 경우 AIReF처럼 재정독립기구의 역할을 이미 국회예산정책처가 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AIReF처럼 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음.
 - AIReF와 달리 재정규칙 준수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면 된다고 생각함.
 - 기관을 신설할 경우, 현재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성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재의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 불필요
 - 스페인의 경우 재정위기를 경험한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은 건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음.
 - 기획재정부가 다른 정부부처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며 체계적으로 국가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기에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지 않음.
 -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국가주요인력 및 예산낭비이며 비효율을 야기함.
 - 국가재정에 통합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면 국책연구기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협업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함.

Ⅲ. 연수 참가자 만족도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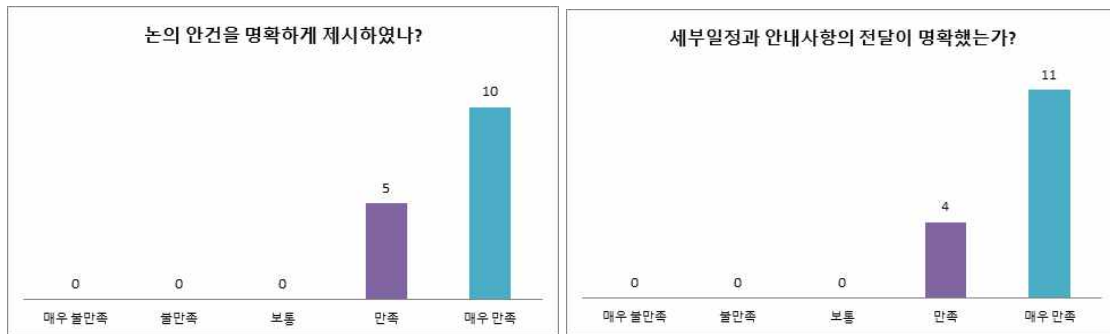
□ 전반적 만족도

- 응답자 전원(15명)이 포럼에 대해 만족의사(‘매우 만족’ 및 ‘만족’)를 표현하였으며, 특히 강의내용(46.7%)과 기관방문(40%)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구체적인 불만족 요소를 묻는 질문에 기관방문, 교육환경이라는 응답이 각 1건씩 있었으며 그 밖에 이동이 불편했다는 응답(1건)이 있었음.
- 포럼의 전체적인 시간 및 시간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86.7%로 전반적인 만족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 진행요원과의 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93.3%로 상당히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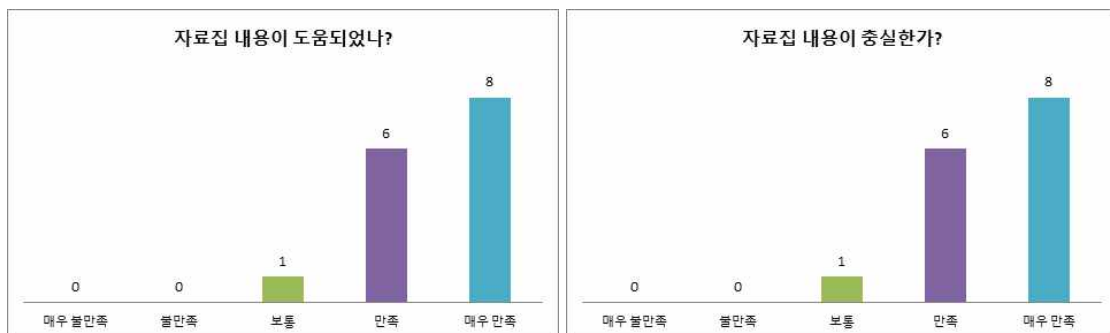


□ 포럼안내 및 자료집 관련

- 응답자 전원(15명)이 각 날짜에 논의할 안건 및 세부일정, 안내사항을 명확히 전달받았다고 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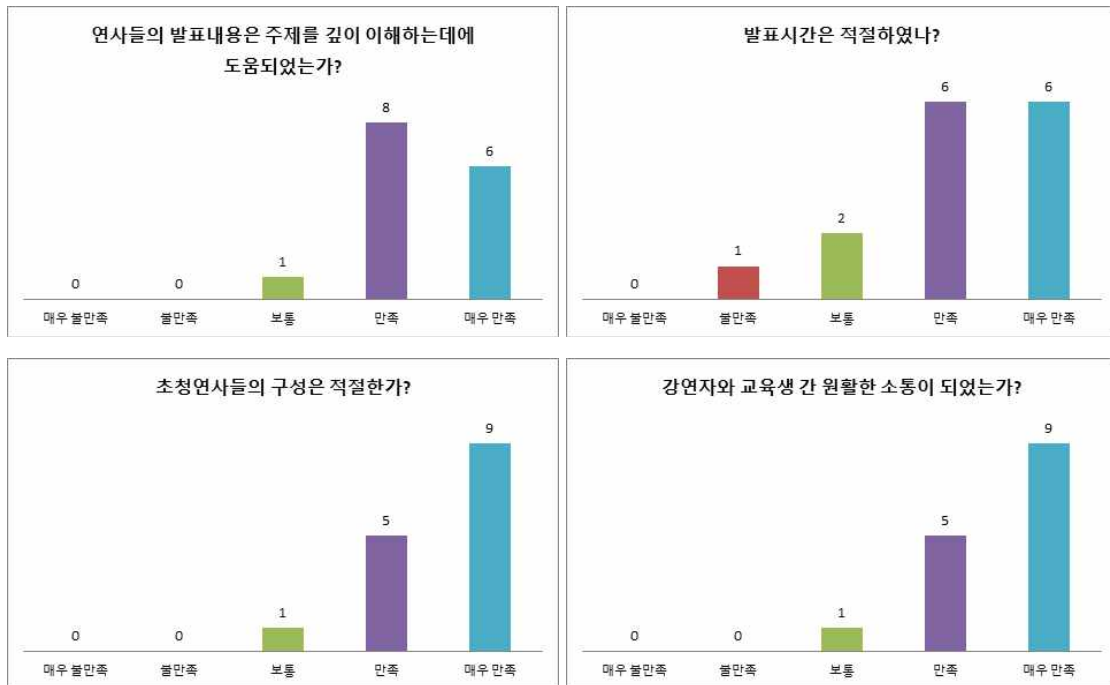


- 1명을 제외한 응답자 전원이 자료집(전자파일) 내용의 충실도와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만족했다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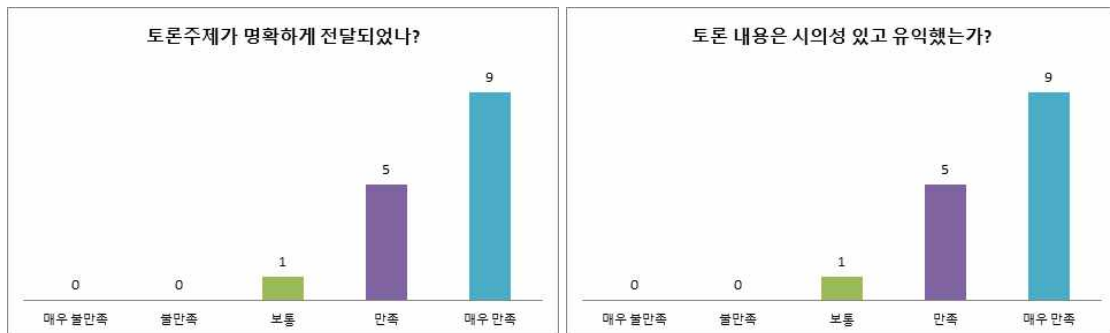


□ 강연 및 토론 관련

- 강연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초청연사 구성, 그리고 강연자와 교육생 간의 소통에 관련해서는 '매우 만족'을 선택한 응답자가 60%로 과반 수 이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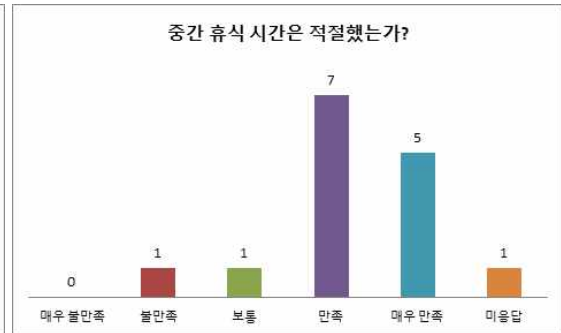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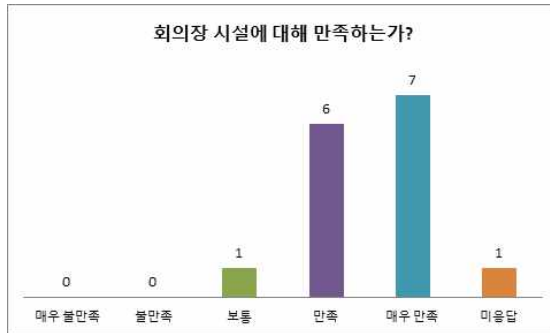


- 토론의 경우, 1명을 제외한 응답자 전원이 주제가 명확하게 전달되었으며, 토론 내용이 시의성 있고 유익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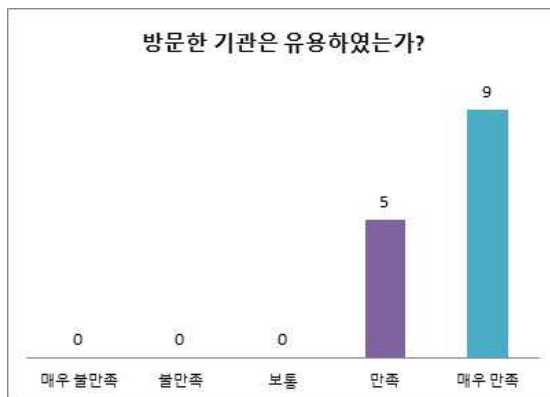
□ 회의장 시설 및 휴식 시간 관련

- 대다수의 응답자(80%)가 회의장 시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함.
- 중간 휴식 시간과 관련해서는 불만을 나타낸 응답자가 일부(6.7%, 1건) 있었음.



□ 방문 기관 관련

- 기관 방문이 유용하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3.3%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기관으로는 카탈루냐 총국 경제재정부(7건)를 꼽았음.



□ 추후 더 알고 싶은 기관 및 주제

- 추후 방문코자 하는 기관으로는, 바르셀로나 내 기타 연구소, 유럽중앙은행, 스페인중앙은행을 꼽았음.
- 그 밖에 지출검토모델, 지출효율화, 재정준칙, 향후 재정 예상(복지, 교육재정교부금 부문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더 알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시사점

- 회의 준비 및 세부 세션 구성 측면에서 카탈루냐 총국 경제재정부 기관 방문 및 강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미루어보아, 추후 기관방문 협의 시 (포괄적인 단일주제가 아닌) 다양한 세부주제와 관련해 강연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음.
- 이동 시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자료집을 전자파일로 제공했음에도 자료집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차년도 사업에서도 자료집은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